

광주 軍·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 명칭 '김대중공항'

**6자협의체 회의서 최종 타결
무안군에 발전자금 1兆 지원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도**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정부 중재 아래 관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 문제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구은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장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월19일 사전 협의에서 마련된 정부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의 여간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

이 담겼다.
합의된 발표 내용은 첫째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의 자금 등을) 지원한다', 둘째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증지)를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이다.
이어 셋째는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

는 한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한다'고 했다.
넷째는 '정부는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다섯째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재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한다'로 돼 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한다'로 했다.
합의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정부 지원 방안과 공항 명칭 변경, 특별법 개정 등 후속 과제를 논의해 예정이다.
무안군은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총 사업비 5조7000억원 규모로, 신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기존 공항 부지 개발 등을 포함 한다.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된다.
광주=정현진 기자 jcrso@siminibo.co.kr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한 공공기관 인건위 '차별'... 규정 개정·지급 권고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소속 기관이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관리 직군에 비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은 제외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의 임용 자격요건과 업무내용·책임, 수행 업무가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정한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입

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직군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은 권위에 기초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를 포함한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징역형 징유... 동물단체 반발

길고양이를 안고고양(러버폰)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징유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승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유를 이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하고 동물학대 재발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3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고고양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고고양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질문을 인정하고 있고 동물 병이나 발광을 초래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이행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효가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이행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한=문민호 기자 mcs@siminibo.co.kr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세워진 전광판에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입국자 검역 '유입 차단→건강·예방중심' 확장 개편

**'여객건강일람' 플랫폼 구축
평상시 정보제공 중심 전환
내년 AI 검역관 개발·실증**

질병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은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상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발표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객건강일람'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질병청은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

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출기 검사 서비스는 2026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와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을 없지않,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회담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

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 2026년 하반기부터 감해공장에서 실증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기의 경우 선박과 같이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아울러 신종 감염병 발생 전과정에 대한 통합 검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검역법에 따른 법정 기념일로서 '검역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몽타주 공개

**경찰, '목소리 지문' 예방 캠페인
검찰 사형등 6중 제재에 공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단서로 범인을 특정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캠페인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성문(聲紋)'으로 불리는 음성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범죄예방 캠페인 '보이스 인티드'를 18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8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문은 개인마다 고유한 음성 특징을 지닌 일종의 '목소리 지문'으로, 범죄자가 경찰·검찰·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사칭 신분

을 바꾸더라도 성문은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적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음성 데이터로 구성된 ▲사칭 ▲대출방자 사칭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남치 범죄 ▲카드 배송 범죄 등 6종을 제작했다.
각 포스터에는 QR코드가 사인 돼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와 수법 설명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싱범 목소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 구매자들에 과태료

식약처, 30명 적발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처 허용된 곳이지 아니한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서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확보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장을 탈바꿈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